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많은 인사들이 신문 지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출판저널>은 새삼 이론적 쟁의 마당을 펼쳐 일간지 보도 행태를 추수하기보다, 쟁론의 장에서 한발 비껴서 있는 현장 언론인 두 사람의 소회를 통해 이 책의 실체를 가늠해보기로 했다. <한겨레> 고명섭 기자는 “신문의 ‘의제 설정’ 기능이 목적의식적인 이념적 지향 속에서 증폭되고 있다.”고 미디어 비평의 시각으로 이 책을 비판적으로 섭렵했다. 또 “책에서 비판하는 민족지상주의는 히틀러식의 파시즘적 민족주의”라며 “그런 억압적 민족주의야말로 반공·분단 국가주의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조우석 문화전문기자는 이 책의 시각에 ‘비판적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그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보인, 현대적 자학사관이라 할 과도한 정체성 비판에 대한 반대명제이자 학문적 균형잡기 노력”으로 평가하며 “현대사를 보는 해석틀의 참신한 제안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옳다.”고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편집자 주>

## “균형감 강조한 ‘편협’, 그리고 드러난 정치적 욕망”

글\_ 고명섭(한겨레기자)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두 겹의 이데올로기 자장 위에 놓여 있다. 한 겹의 자장은 책 바깥에서 발원하고 다른 한 겹의 자장은 책 안에서 발원한다. 책을 바깥에서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자장은 바로 말하면, 언론이다. 한국의 보수 우익 신문들은 이 책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벌써 책의 출간을 크게 알렸다. 이것만으로도 출판 보도 관행상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위시한 보수 신문들은 이 책의 출간 예정 사실을 2005년 2월 2일 치에 일제히 사설로 다뤘다. 그 일사분란함은 책의 출간을 환영하는 똑같은 논조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조선일보> 사설(‘해방 전후사 ‘재’ 인식의 필요성’)은 “좌파 민족주의에 치우쳐 대한민국의 건국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외세에 끌려다니는 암울한 역사로 기술한 ‘해전사’(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낡은 틀에 맞서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며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해방전후사 재조명을 환영한다’)도 “그간 우리 현대사에 대한 인식은 너무 이념에 얽매어 있었다”며 “역사를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시켜 객관화하려는 이 같은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동아일보 사설(‘‘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재인식’)도 똑같은 논리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출

간을 미리 환영했다.

이건 한국 신문의 보도 역사를 보건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책이 책으로서 모양도 갖추기 전에 신문의 얼굴이자 양심인 사설을 통해, 그것도 여러 신문이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한목소리로 책의 내용을 평가하고 상찬하는 일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춰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신문들의 이 예외적인 보도 양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책이 몇 부 팔렸는지를 마치 중계방송하듯 기사화하는가 하면, 후속 칼럼을 신고 논쟁을 연속물로 마련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를 합하면 20일 세 신문 각각 10여 건씩에 이른다. 출판 보도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기사의 폭주다.

이 정도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의 출간이 사건인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보도 행위 자체가 예외적 사건이다. 여기서 신문의 ‘의제 설정’ 기능이 신문 내부의 목적의식적인 이념적 지향 속에서 증폭되고 있음을 눈치 채기는 어렵지 않다. 이데올로기적 욕망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말이다. 이 신문들의 이데올로기적 감수성을 촉발시킨 것은 아마도 이 책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대항의식 속에서 기획되고 편집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은 사실들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비판에 특히 초

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70년대 말에 제1권이 출간된 이래 10여 년 동안 이른바 '80년대 세대'의 역사인식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고, 이 세대는 현재의 집권세력의 정치적·정서적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단순한 지적 대항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 지형도 안에서 집권 세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의 정치적 반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사설에서 거의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신문들이 《재인식》을 떠받들고 나선 것은 집권 세력에 대한 이념적 공격의 한 방식인 것이다.

그리하여 신문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 자장 안에서 이 책은 이념적으로 해석되고 정치적으로 무기화한다. 역사인식을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정치 세력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부 신문들의 정치적 욕망이 이렇게 의제 설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 책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자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자장은 책의 내부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내부의 자장이 있기 때문에 신문들이 그 자장의 힘을 받아 외부에서 또다른 자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내부의 자장과 외부의 자장은 이런 방식으로 조응한다.

책 내부의 자장은 기획과 편집에서 형성된다. 《해방 전후사 재인식》에 참여한 필자 28명은 하나로 아우르기 어려울 정도로 성향에 편차가 있고, 그것을 편집위원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 차이를 어떻게든 같음의 형식을 갖추어 묶어내는 것이 기획과 편집이다. 기획과 편집이 책을 규율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 책의 머리말은 그 기획·편집의 근본 의도를 집약해서 보여준다. 편집위원을 대표해 머리말을 쓴 박지향 교수는 “그 무렵(2004년 초가을), 1980년대에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지면을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 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초판 머리말)라고 밝힌다. 처음부터 정치적 의식이 생각의 한가운데 있었음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그런데도 박 교수는 바로 뒤에서 “편집위원들은 이 책이 어떤 현실정치적 함의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다”고 거리낌없이 말한다. 이 모순된 진술 속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돼 있다. ‘객관’과 ‘사실’만을 자료로 삼아 역사를 역사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선언과는 달리 편집위원의 마음은 벌써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자신이 편집한 이 책의 ‘객관성’과 ‘균형감’을 강조하는 방편으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편향’과 ‘편협’을 문제 삼으면서, 그 편향의 대표 사례로 ‘민족 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을 제시한다. 그런데 박 교수는 이 중 ‘민족 지상주의’를 표적으로 삼아 가혹하게 비판한다. 여기서 먼저 지적할 것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민족 지상주의를 설교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한반도 민중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린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 중요한 동력으로 민족주의를 지목하고 있다. 특히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이야기하는 민족주의는 당시의 지배세력의 반공·분단 국가주의에 질식당한 그 민족주의다.

그런데 박 교수는 모든 민족주의를 ‘민족 지상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족주의는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이다. 그것은 자기 민족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해 다른 민족들을 깎아내려야 하는데, 이 점에서 민족주의는 굳이 배타적일 필요가 없는 혈육이나 고향에 대한 애정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민족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민족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에 관한 고전적 저작인 에르네스트 르낭의 《민족이란 무엇인가》만 보아도 민족주의에 다양한 색깔과 성향이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르낭은 프랑스의 민족주의를 독일의 인종적 민족주의에 대비시켜 서술하면서, 독일식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비판하고 있다. 박 교수가 말하는 민족주의 혹은 민족 지상주의는 히틀러가 극단으로 보여준 배외적·침략적·파시즘적 민족주의다. 그런 억압적 민족주의야말로 박 교수가 은근히 변호하는 한국 현대사의 집권 세력, 다시 말해 이승만-박정희류에게서 관철된 반공·분단 국가주의에서 발견된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이야기했던 민족주의, 즉 박 교수가 비판하는 민족주의는 오히려 그런 폭력적 국가주의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뇌한 민족주의다.

박 교수는 또 이런 말도 한다. “민족 지상주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논리와 관련된 여러 양태에서 잘 드러난다. 민족지상주의는 민족이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하고 지고의 가치로 부상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상천외한 이념을 국민 앞에 내세우면서 그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이야말로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발언이다. 오늘 남과 북 사이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반 세기 동안 너무나도 철저하게 서로를 부정하고 증오했기 때문에 그 반목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풀어 서로 돕고 화해하자는 정치적 제스처임은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알 일이다. 그걸 두고 민족지상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그 이름을 통해 나치즘식 인종적 민족주의를 연상시켜내는 것이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이다. 분단이 낳은 그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보자는 민족주의를 독일의 극단적 사례까지 들먹이며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씌운 ‘이념적 편향’이라는 레토릭이야말로 박 교수의 주장 안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지시한다. 해방 전후사를 둘러싼 ‘인식’과 ‘재인식’을 엄정한 학문적 논쟁의 장에 세우려면, 이런 이데올로기적 자기 기만부터 걷어내야 한다. **주필**